

국민연금 9.5% 시대... “보장 확대” vs “재정 안정” 격돌

연금과 생존전략

연금개혁 현 주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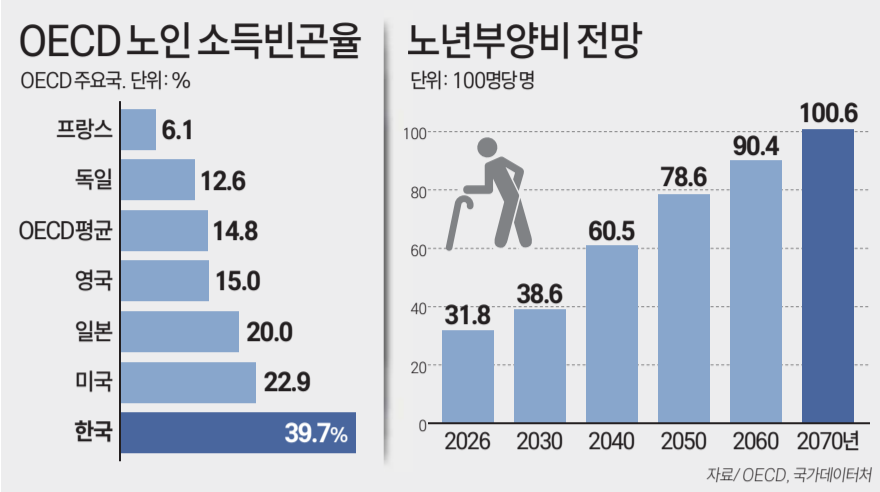
국민연금은 올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에 돌입했다. 작년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에 따른 인상이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 수준으로 유지됐던 보험료는 올해부터 9.5%로 올랐고,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기존 40% 수준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적용된다.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단행됐지만,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보험료율 조정을 비롯한 개혁을 이어갈 전망이다. 기대수명 연장과 출생률 감소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재원인 국민연금 기금도 점진적인 소진이 불가피해서다.

◆ 연금개혁,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은 만 18~60세의 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한다. 가입자가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연금보험료로 납입하면 이를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연기금)’을 조성 및 운용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년간 연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연 평균 10.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기금 적립액은 1458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납입액보다 지급액이 많으면 연금 지급 재원인 연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연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 보험료, 2033년 13%까지 올릴 전망 기금소진 2056년 → 2064년으로 與 “노인 빈곤률 고려 보장성 확대” 野 “재정 안정성 먼저 확보해야”

다.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파르게 커진다.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3%의 보험료율과 70%의 소득대체율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졌었다. 매달 소득의 3%씩 40년을 납입하면 65세부터는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70%를 지급한다는 약속이다. 1988년 출생자의 기대수명이 70.7세에 그쳤던 만큼 높은 소득대체율을 약속할 수 있었다.

1차 연금개혁은 지난 1998년 단행됐다. 3% 수준이었던 보험료율은 9%까지 올랐고, 70%의 소득대체율은 60%까지 낮추는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이었다. 기

대수명이 74.7세까지 늘었고, 1988년 1인당 1.55명 수준이던 합계출생률은 1996년 산아제한 폐지에도 1998년 1.46명까지 하락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서다.

2007년에는 2차 연금개혁이 단행됐다. 20년에 걸쳐 소득대체율을 매년 1%p씩 인하해 40%까지 낮추는 ‘그대로 내고 덜 받기’ 개혁이다. 하지만 2007년 1.26명이었던 출생률은 2018년부터 1명보다 낮아졌고, 지난 2024년에는 0.75명까지 내렸다. 반면 기대수명은 83.7세까지 늘었다. 고령자들이 연금을 받아가는 기간은 늘었는데, 보험료를 납입할 세대는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더 내고 더 받는’ 3차 연금개혁이 진행됐다. 2056년으로 전망됐던 기금 소진은 2064년까지 약 8년 늦춰졌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역대급 상승을 지속하며 기금소진이 수년 더 늦춰졌다. 하지만 연금을 받아갈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인구구조가 형성된 만큼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여·야

도 3차 개혁 당시 해당 개혁안을 ‘불완전한 방안’으로 평가하고 논의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 소득보장 vs 재정안정

여·야는 지난해 3차 연금개혁 직후 여·야의원이 동수로 참여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연금재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감대가 형성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우선 처리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국내 66세 이상 소득 빈곤율 39.7% 미래세대, 노인인구 부양비 부담 퇴직연금·기초연금 개혁 논의 확대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마련돼야

연금특위는 최근 배달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편입, 정년 연장 추진에 따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대의 상향 등의 안건을 논의 중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야 공감대가 있고 선거에 부담이 덜한 안건부터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여당의 ‘보장확대 우선’ 방안과 야당의 ‘재정안정 우선’ 방안을 놓고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방향성에는 뜻을 모았지만, 높은 노인 빈곤률을 고려해 보장성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여당과 재정 안정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차가 수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

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4.8%보다 2.7배 가량 높다. 소득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이 50% 이하인 상황을 말한다. 1988년에야 공적 연금제도가 마련되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가 많고, 고령자의 자산은 부동산에 치중돼서다.

반면 미래세대의 부담도 막대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0명당 14.8명이었던 노인인구부양비는 2026년 31.3명까지 늘었다. 생산인구(15~64세)가 부양하는 노인이 16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현재 출생률이 유지되면 오는 2070년에는 노인인구부양비는 100.6명까지 치솟는다. 높은 노인 빈곤률에도 국민연금의 보장 확대에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연금개혁 선택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개혁 논의가 확대됐다.

퇴직 시 목돈을 지급하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도입된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등 수익률 제고 방안도 본격적인 입법을 앞두고 있다. 소득 하위 70%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재정안정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ODM 3사, 엇갈린 행보... 글로벌 전략 재수립

(제조개발생산)

K뷰티 지도 바뀐다

한국콜마, 해외법인 철수... 국내 복귀 코스맥스, 中 ‘뷰티밸리’ 핵심 공략 코스메카, 북미시장서 성장 창출 나서



한국콜마의 세종 기초화장품 공장 전경. /콜마그룹

K뷰티 열풍의 실질적 주역인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글로벌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콜마는 수익성이 낮은 해외 법인의 비중을 줄이는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반면, 코스맥스와 코스메카코리아는 해외 현지 지배력을 강화한다.

7일 국내 뷰티 업계와 최근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해외 사업이 부진하다. 지난해 중국 법인 매출은 15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소폭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6% 급감했다.

미국 법인 역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미국 법인 매출은 5.3% 줄어든 549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자는 134억원으로 전년 60억원에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캐나다 법인 매출은 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9% 축소됐고 영업손실은 54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해외 법인이 수익성 확보에 난항에 빠지자,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은 철수해 국내 복귀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산업통상부에서 한국콜마는 2026 첫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됐고 지난달에는 세종시와 전의 일 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물량에 역량을 집약해 글로벌 수요에 대응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코스맥스는 현지 밀착형 전략을 고도화해 글로벌 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코스맥스는 지난 3일 중국 상하이시를 통해 코스맥스차이나가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상하이시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이번 인증으로 코스맥스는 상하이시로부터 우선 설립 및 임대료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 수출입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스맥스는 중국 ‘뷰티 밸리’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하이 신사옥 준공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코스맥스의 현지화 행보는 실적 수치로도 증명됐다. 코스맥스 중국법인은 지난해 연간 매출 6327억원을 올리며 전년 대비 10.2% 성장했다.

코스메카코리아는 북미 시장에서 K뷰티 주인 자리를 노린다. 코스메카코리아 미국법인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2168억원, 영업이익은 374억원이다. 각각 전년 대비 19%, 99%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미국법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이다.

코스메카코리아 미국 사업 성장에는 잉글우드랩 인수가 뒷받침됐고 최근 코스메카코리아는 주식 공개 매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잉글우드랩 지분율을 기존 50%에서 66.7%로 늘렸다.

/이청하 기자 mlee236@



metro

정유사, 두 달간 ‘대체 원유’ 1.1억 배럴 확보

산업부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 비축유 스왑 속도, 나프타 지원 검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정유 4사가 4~5월 두 달간 대체 원유 1억10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4월 5000만 배럴에 이어 5월에도 계약 기준 60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도입량 대비 4월 60%, 5월 70% 수준이다. 도입 국가는 사우디, 미국,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브라질, 호주, 콩고, 가봉, 캐나다 등 17개국이다. 여기에는 강습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서 확보했다는 2400만 배럴도 포함돼 있다.

민간 정유사의 수급을 돕기 위한 비축유 스왑(대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4개 정유사의 신청 물량은 3000만 배럴을 넘어섰으며, 이번 주까지 총 800만 배럴 규모의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다. 양 실장은 “이미 2건의 계약이 완료돼 비축유 이슈가 끝났으며, 금주 내 4건 이상의 추가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액제 포장재와 주사기 등 의료기기 재고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사용 가

능한 재고를 확보했으며, 대체 수입선을 통한 시제품 테스트도 진행 중이다. 다만 주사기 포장 원료 일부에서 부족 조짐이 있어 공급 협의를 진행 중이며, 병원 측에는 과도한 선주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핵심 산업 소재인 ▲반도체용 헬륨(미국산 대체 완료)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말레이시아·인도 등 확보) 등은 현재까지 공급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가 상승에 민감한 페인트와 농업용 필름, 식료품 포장재 등은 범부처 TF를 구성해 밀착 관리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 수급과 관련해 정부는 예산 지원을 검토 중이다. 양 실장은 “4월 나프타 수입 예상 물량은 77만 톤으로 예년의 70% 수준이지만, 국내 생산분을 합치면 평시 대비 80~90% 수준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경을 통한 ‘차액 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일 계약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 및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산업 위기 지역 내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4.2%)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수수 기자 hys@



metro